



## 「어촌·어항법」 국회 빨리 통과돼야

지난 한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민생문제와 경제문제는 외면한 채 당리당락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난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국회를 무조건 비난할 수만도 없는 부분이 있다. 각자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것처럼,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다름아닌 민생문제이다. 적어도 국민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근본 틀을 만들어 주는 것 만큼은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는 무관하게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2005년 새해는 희망이 보인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이후 양대 정당이 올해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그런 해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선언의 연장선상에 '어촌·어항법'이 있다. 즉, 어촌 어항이 바다 경영의 최일선에 있으며 '바다는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바다를 가꾸고 바다에서 부를 창출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른 아닌 경제문제에 속한다.

여기에서 '수산물 생산과 어촌관광 등으로 인한 부의 창출을 통하여 어업인은 물론 어촌 지역 주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부분은 민생문제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어촌·어항법은 경제 문제인 동시에 민생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어촌·어항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하루 빨리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이 법이 급격한 산업화 이후 어찌면 가장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계층의 한 부류가 돼가고 있는 어업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창한 경제문제이기 전에 앞서 심각한 민생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장 근본적인 법안이 각 정당이 내세우는 굵직굵직한 현안의 그림자에 가려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구차한 이야기지만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또 한번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어촌 어항 어장 관계 법규를 깔끔히 정비한 상태에서 정부조직을 어항부에서 어항어장정비부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어항협회의 명칭을 전국어항어장협회로 바꾸어 개정된 규정으로 연안지역 개발과 마리노베이션을 추진하며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어촌 어항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어장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은 통합개념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계 수산업의 경향이 어촌 어항 어장 종합 개발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고서는 존립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만큼 연안역(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하는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어촌·어항법' 통과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혼한 말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바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당초보다 몇 배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촌·어항법이 통과됐다해서 하루

아침에 연안역이 개발되고 어업인의 현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현실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현재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 분야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중요하다.

국회일이 어느 것 하나 바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 까마는 어촌·어항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수산업과 어업인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갈망해 본다. (어촌어항소식)

